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보도자료</b> 2026. 4. 30.(목)	 <b>한국대학교육협의회</b>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 href="http://www.kcue.or.kr">http://www.kcue.or.kr</a>

문의 : ☎ 02-6919-3901 고등교육연구소장 : 강낙원 / 정책연구팀장 : 김정희 / 담당 : 조혜진 선임연구원

## 대교협,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4월 30일(목),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이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교육으로 재편되어 평생학습의 주요한 거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것과 「교육기본법」과의 대등한 역할 분담 구조로서 「평생학습기본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학에서의 정규 학위과정 이 확대·재편되고 있는 만큼 대학 내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전 생애 학습의 핵심 거점으로 대학이 학령기 이후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붙임. 종합토론 요지 세부내용 참조

□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생교육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평생학습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교협은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현장>





붙임.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 종합토론 요지. 끝.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 종합토론 요지**

- 강대중 서울대 교수(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는 「교육기본법」과 「평생학습기본법」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보완 관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 위에 평생학습 거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가·확장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관련 법 개정 시 대학이 두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오늘 논의가 법 체계 개편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재정 구조와 데이터, 대학 현장의 실행체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대교협이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주도, 질 관리 거버넌스 설계, 대학간 공유 플랫폼 구축, 앵커 체계에서의 격차 조정 등 핵심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함
-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평생학습기본법」의 제정은 기존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과의 관계 및 해당 법률의 준치와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전부 개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음을 제시함
- 한용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학습기본법」을 추가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교육기본법」의 명칭을 「평생교육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로 전면 개정하여 영유아·초중등·대학·직업교육·평생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평생학습 기본사회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넘어 국가평생교육 추진체계 자체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함